

안양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2015. 11. 6 예규 제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 라. 시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

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절대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2. 국민권익위원회
3. 감사원
4. 수사기관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총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한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

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관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과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수사기관

4.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

자의 신변을 보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한 뒤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뒤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 공개 및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등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신고를 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자를 제외하고 부패행위와 관련한 진술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시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분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부패행위자 공개) 책임관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시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20 년 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비고